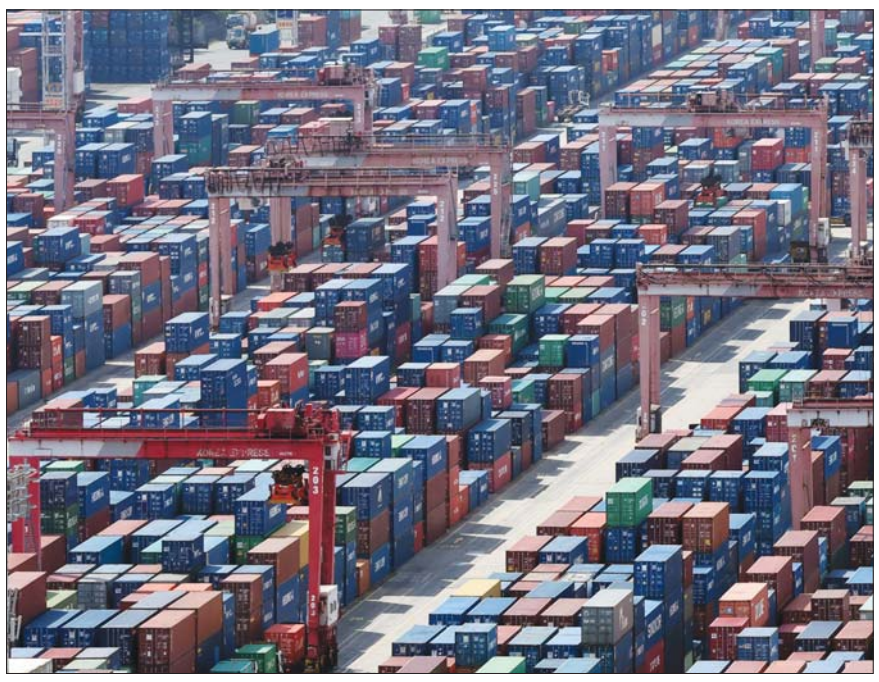
WTO 기술규제 3304건 역대 최고치
韓 수출기업, 비용증가 등 부담 가중

산업부, 전년 동기比 4.0% 증가
미·EU·중 등 주요국 규제 강화
인도, 내년 미인증 기계류 제한
정부, 규제완화 협의·지원 추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글로벌 기술규제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가 새롭게 도입한 기계류 안전인증제도(Scheme X)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총 3304건으로,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통보 건수도 11.2%(520건→578건) 늘어났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뒤범퍼·연료탱크) 및 가전제품(세탁기·에어컨 등)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전년(302건)보다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EU는 화학물질·화장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국가별 철도안전기준을 통합안으로 일원화하는 등 83건(전년 대비 10.7%↑)의 규제를 신설·변경했다.

중국의 경우 생활용품과 소방설비(감지기·소화기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며 167건(전년 대비 16.8%↑)을 기록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24년 8월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한 바 있으며,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펌프·압축기·절삭기 등 기계류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에 수출할 수 없다.

규제 적용 품목은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이다. 공작기계류 대 인도 수출은 2022년 1억5900만달러에서 2024년 2억2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6.6%에서 8.1%로 높아진 상태다.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서류심사→공장심사→인증획득 절차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6년,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는 공장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공장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의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세부 매뉴얼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오는 12월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애로사항은 무역기술장벽(TBT) 포털 knowtbt.kr을 통해 접수 중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농기자재, 중동 수출 교두보 세운다

농식품부, 사우디 박람회서 한국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산 농기자재의 중동시장 판로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0~23일 나흘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5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박람회(Saudi Agriculture 2025)'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친환경농자재, 농기계, 비료, 농약 등 K-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총 14개사의 참가가 예정돼 있다. ▲친환경농자재 6개사-천지바이오, 고려바이오, 새틴바이오텍, 케이에스씨, 쉐어그린 ▲농기계 2개사-위캔글로벌, 헬퍼로보텍 ▲비료 2개사-코트그린 농업회사법인, 효성오앤비 ▲시설자재 3개사-대양, 리츠, 이시시 ▲농약 1개사-한얼싸이언스 등이다.

이번 박람회는 중동 등 세계 농업 기술, 기자재, 식품가공 및 축산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이다. 세계 29개국에서 37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 2만7000여 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시장 규모는 2025년 181억 달러에서 2030년 257억 달러까지 연평균 7.2%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료와 농약, 친환경 농자재·시설자재 등 농기자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막기후 극복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많아,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진출 의지가 높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공동홍보관 운영과 함께,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업해 바이어 발굴도 주선한다. 또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1:1 수출상담을 진행해 MOU 체결, 구매계약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람회 개최 첫날인 20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함께 '2025 사우디아라비아 K-스마트팜 로드쇼'도 개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와 스마트팜의 수출 및 교류·교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농작업 대행 확대… 농촌 인력난 해소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 지원

농협중앙회가 '농작업 대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종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벼 수확 시연회'가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벼 수확 ▲경운 ▲방제 등의 농작업이 시연됐고 스마트농기계와 농자재(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이 전시됐다.

17일 세종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벼 수확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농협

농협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직영 농작업 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직영 농작업대행 확대 ▲적기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농업 현장 스마트화 가속 등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 회장은 "농심천심 정신으로 농업인을 최우선에 두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며 "직영 농작업대행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 회장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관내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222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145만 헥타르(ha)의 직영 농작업대행과 39만ha의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헬스장·요가 '환불 불가' 약관 사라진다

공정위, 환불 제한 약관 집중 점검
터닝포인트짐 등 체인형 시설 시정
환불 불가·과도한 공제 전면 삭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들이 회원의 계약 해지와 환불을 제한하던 불공정 약관을 대거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다수 발생한 터닝포인트짐, 엠휘트니스9, 바디스,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24GYM 등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체인형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한 상품은 환불 불가" "양도받은 회원권은 해지 불가" 등 환불 자체를 금지한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또 "1일만 이용해도 1개월로 간주", "카드 결제 시 위약금 외 카드수수료 4% 추가 부담" 등 과도한 공제 조항도 있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헬스·필라테스 등은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체육시설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자진 삭제하거나 일할 공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은 "운동 중 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은 전적으로 회원 책임"이라고 규정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나면 점유자·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사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공정위는 또 해지 접수를 "토·일요일 13시~17시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분쟁 시 "센터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한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먼 지역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각각 삭제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 기준과 사업자 책임이 명확해져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 해약 시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 체육 참여율은 60.7% 수준이며, 시설별로 헬스장(체력단련장) 34.8%, 요가·필라테스·태보 연습장 17.5%, 골프연습장 12.3% 순으로 많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난, 베트남에 AI 감사기법 전파

KOICA 초청 베트남 연수단 방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베트남 감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감사기법과 청렴경영 사례를 전파했다. 한난은 지난 17일 성남 본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공공감사 연수단'을 맞아 AI 감사사례, 감사기구 운영체계, 성과평가 체계 등 감사운영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베트남 국가감사원(State Audit Office of Vietnam)과 정부감찰원(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 소속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KOICA ODA사업 '베트남 감사 역량강화(2023~2025) 초청연수'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난은 이날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는 '스마트 감사혁신' 사례를 공유해 큰 관심을 받았다.

김좌열 한난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의 본질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며 "AI 시대에는 데이터 기반 감사기법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공공감사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한난은 감사원 등 대외평가에서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청렴은 제도가 아닌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